

환경부, 전기차 화재대응 높이고 안전한 충전 기반시설 확충 속도

전문가 29명 구성 협의체 발족
4개 전문분과 활동방향 등 토의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와
충전기 123만기 보급 목표 설정

환경부가 6일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강화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학계와 연구기관, 민간단체, 산업계 등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이 협의체는 보급뿐만 아니라 화재 대응 기능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서울 모처에서 열린 이날 발족식에서는 △정책·제도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등 4개 전문분과의 활동방향·개요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협의체의 향후 활동 기간 중, 정책·제도 분과는 전기차 및 충전기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등 법·제도 개선사항 검토를 맡게 된다.

전기차 분과 및 배터리 분과는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관리를 위해 화재예방 기능 추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또 배터리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도입한다.



환경부.

/뉴시스

충전기 분과는 화재 예방·대응 기능을 장착했거나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기능이 있는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화재예방 미래형 충전기 사업에 800억 원 규모를 책정한 바 있다.

이장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협의체와 함께 안전한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기를 향후 7년 내 120만기 이상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 등 대중화에 대비해 충전기 123만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 완속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련됐다.

화재 예방 대처방안이 포함된 것이 특징인데, 효과적 대처를 위해 차량 특성에 맞는 화재진압 방법을 개발하고 장비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곤충 가축지정 범위 16종으로 확대 추진

농식품부, '곤충의 날' 기념식

제5회 '곤충의 날' 기념식이 7일 대구엑스코(EXCO)에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곤충산업과 관련된 학술토론회와 우수 곤충 제품 및 자동화 설비 전시·홍보의 장도 함께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가축으로 지정하는 곤충의 범위를 14종에서 16종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곤충산업을 축산의 새로운 한 분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한국국제축산박람회(6~8일)와 연계해 열린다.

이번에 새로 가축으로 지정된 곤충은 아메리카 동애 등에, 비메뚜기이다. 기념식에서는 곤충사육 기술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곤충제품 연구·상품개발 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 곤충산업 유공 표창장을 수여한다.

이어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열리는 학술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곤충산물의 신가치 창출을 위한 식용 곤충·메디푸드, 사육 자동화 기술, 수

출 활성화 방안, 분야별 산업 현황 및 연구개발 동향 등을 공유한다.

전시 홍보관에서는 24개의 곤충산업 우수제품 전시·홍보 부스가 차려졌고 판매 등이 진행된다. 곤충자원 산업화 지원센터를 운영중인 충북, 경남 등 5개 지자체, 곤충산업중앙회 등 관련협회, 기업(케일·엔도모 등)이 참여해 곤충식품(과자류, 영양제 등), 반려동물 간식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또 자동먹이급이 장치 등 곤충사육 자동화 설비 전시·시연 및 상담부스 운영을 통해 기업과의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성과도 기대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곤충의 날 행사가 정부와 지자체, 기업 및 관련 단체가 국내 곤충산업 육성에 뜻을 모으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곤충산업이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으로, 소비자에게는 가치소비의 기회로, 국가적으로는 신성장동력 창출 모델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차상근 기자 skc8472@

국내 첫 수소지게차·굴착기 충전소 준공

산업부, 전북 군산시 준공식 개최

국내 최초의 건설기계·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가 준공됐다. 지게차·굴착기 등 비도로형 특수장비 시장에서도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한 수소모빌리티 보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전북 군산 소재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내 종합시험센터에서 수소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지게차·건설기계 등 기타 수소모빌리티의 경우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야만 충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5월 '수소 안전



수소충전소 구축 현장.

/산업부

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한 이후 수소모빌리티와 관련된 각종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수소중장비가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중장비 대비 대용량 에너지 저장에 유리하고, 충전시간이 3~5분으로 짧아 기존 디젤 건설·산업장비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수소중장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韓-日, 외국인근로자 정책 등 정보교류 재개

노사발전재단, 日 JILAF과 교류 행사
코로나 19 여파로 중단된 지 4년만

노사발전재단이 6일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과의 정기교류를 4년 만에 재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부터 사흘간 한일 양국의 '외국인근로자 정책공유'와 관련한 교류프로그램 행사를 서울에서 진행한다.

일본 대표단은 야쓰노부 아이하라 이사장과 토시히로 모토바야시 전무이

사를 비롯한 4명으로 구성됐다. 일본국제노동재단은 일본노동조합총연맹회(RENGO) 산하 공익재단으로 노동 분야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우리나라 노사발전재단과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고용·노동분야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공유해 왔다.

양측은 첫날 개최된 노동분야 워크숍에서 외국인력 정책을 공유하고 현안을 살피는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겪고 있는 저출

산·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일 서틀외교 복원을 위해 올해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우리 재단과 일본국제노동재단 간 교류가 한일관계 복원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대표단은 방한 기간에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을 방문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공정위, 약정없이 관촉행사한 '세이브존아이앤씨' 적발

납품업자에 행사비용 절반 부담시켜
과징금 7200만원·과태료 300만원

도심형 아울렛 '세이브존' 운영사가 납품업체와 약정없이 관촉행사를 진행하고, 납품업체에 행사 소요 비용 절반을 부담토록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6일 세이브존 운영사 세이브존아이앤씨에 관촉행사 서면 미약정과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통지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이브존 브랜드는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



세이브존 부천상점점

/홈페이지

법인이 사용 중인데, 이 중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이번 법 위반행위 사업자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세이브존 브랜드로 노원점, 성남점, 광명점, 대전점, 부천상점, 전주코아점 등 6개 아울렛 점포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아이앤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기간 중 56개 납품업체(임점업체)와 94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했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50%인 1800만원을 납품업체들에게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 사전 약정, 납품업체의 판매촉진 행사 부담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화되는 관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용 부담 50%를 초과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탄소중립 전환 용자지원사업' 2차 공고

산업부, 2~3건 선정해 7.4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사업'의 추가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2차 공고를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3월 1차 공고를 통해 '메탄 감축에 특화된 바이오차비드 및 파일럿 설비 개발' 등 용자지원 11건, '에너지 절감형 대형 냉동·냉장고용 우레탄판넬 저장고' 등 이차보전 지원 2건 등 총 13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96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2698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산

업부는 예상했다.

이번 2차 공고 대상은 이차보전 지원 프로젝트로 산업부는 2~3건을 선정해 7억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금의 2%를 보전하므로 대출조달 가능 금액은 370억원이다.

공고문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적합성 검토와 기술성 평가 등을 거쳐 10월 말 선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연구개발과 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프로젝트 선정 평가에 온실가스 검증 공인기관을 참여시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반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예산도 크게 확대해 사업 성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